

# 공사대금 받아주오... 건설 하도급업체 민원 급증

### 광주 작년 18건...올들어 벌써 12건 분쟁조정 신청

### 대부분 대금 미지급...“조정 장기화면 경영난” 호소

지역 건설경기가 울어들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대부분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공사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것인 만큼 빠른 조정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2012년 22건에

서 지난해에는 18건으로 줄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 이날 현재까지 12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감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다음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일감을 주는’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계 신고하지 못해왔다는 점, 그리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조정 신청 접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베란다 창호 공사업자인 A씨는 2012년 9월 B종합건설사로부터 베란다 공사를 위탁받아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쳤지만 B사가 60일이 지나도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신청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위가 두 차례 중재를 했음에도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에 건설 하도급 관련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총 52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0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5건), ‘부당한 위탁 취소’(3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기타 4건이었다.

공정위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게 되며,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자체조사를 벌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하도급업체들은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원청업체의 보복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올들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짐에 따라 조정기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최근 늘어나는 건설 하도급 분쟁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진도·안산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사업주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피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부

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소재해도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주들에 대한 행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립뉴스

## KT 시장점유율 10년만에 30% 붕괴

지난달 KT의 시장점유율이 십수 년만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영업 정치 여파에 의한 것이지만 2002년 이후 고착화된 SKT, KT, LG유플러스간 5대 3대 2 구조가 깨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변화가 주목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무선통신가입자를 집계한 결과,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 50.42%, KT 29.86%, LGU+ 19.72%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그 전달과 비교하면 SKT는 개선, LGU+ 선방, KT는 악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KT의 시장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10여년만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KT의 전체 가입자 수(MVNO 포함)는 1647만3385명으로 전월의 1652만6330명에 비해 5만 2000여명 줄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이통시장은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시장 점유율 50% 시대를 연 이후 현재까지 5대 3대 2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거의 12년 만에 이 구조가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다.

이런 점유율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 3사가 모두 불법보조금으로 영업정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정부 당국의 순차적 제재 방식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난달 KT와 LGU+가 먼저 영업정치됐다.

/연립뉴스



**일자리박람회 인파** 24일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4 호남권 일자리박람회'가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3월 광주 인구 1425명 줄고 전남 786명 늘어

지난 3월 광주 인구는 순유출된 반면 전남은 순유입했다. 광주·전남공공출생인구조사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월 7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인구가 도시를 빠져나갔다.

전남은 총인구 2만8863명, 총출생 2만7877명으로 786명(0.04%)이 순유입됐다. 전남은 올해 들어 1월 800명, 2월 1000명이 연속 순유출됐으나 3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한편, 2월 출생아 수는 3만7000명

로 1425명(-0.10%)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광주·전남공공출생인구조사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월 7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인구가 도시를 빠져나갔다.

전남은 총인구 2만8863명, 총출생 2만7877명으로 786명(0.04%)이 순유입됐다. 전남은 올해 들어 1월 800명, 2월 1000명이 연속 순유출됐으나 3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한편, 2월 출생아 수는 3만7000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명(0.8%)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이 미미한 폭으로 증가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2월에 날씨가 추워 사망자가 많았던 탓에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98.34 (-2.03)	코스닥지수 561.12 (-4.35)	금리(국고채 3년) 2.88% (0.00)	원·달러 환율 1039.20원 (-0.60)
--------------------------	-------------------------	----------------------------	-----------------------------

금감원, 전국 85개 금융사 민원발생 평가

## 광주은행 고객불만 가장 적다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2013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민원발생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에 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등 전국 8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민원건수와 민원해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됐다.

24일 금감원에 발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아 소비자보호 우수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을 받은 금융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마크를 각종 마케팅 등에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위주의 업무처리 및 민원 감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김장학 행장 취임 이후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예방 교육 실시, 민원상담 창구 설치, 매주 월요일 민원 제로데이 운영, 매일 전직원 소비자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등의 활동을 펼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장학 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지역밀착 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우수은행으로서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작년 전남 농가소득 3385만원

전국 평균 밑돌아...제주·경기·충북 순 높아

지난해 농작물 생산물 소비 호조에 힘입어 농가 수입 증가율이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남지역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소득은 전체적으로 소폭 늘었지만 방수 우려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인 여업의 소득은 줄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가 및 여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전남지역 농가의 3385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3452만 4000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164만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았으며 경기도가 3974만8000원으로 2위, 충북이 3541만8000원으로 3위였다. 전남은 경북의 3489만4000원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경남이 2994만6000원으로, 9개 조사대상 지자체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았다.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 3452만4000원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1994년(20%)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전국 농가의 소득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15.6%), 농업소득(9.9%), 비경상소득(8.7%), 이전소득(4.1%) 순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가구당 농업소득은 9.9% 늘어난 1003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농가 가구당 농업외소득은 전년 대비 15.6% 늘어난 1570만 5000원을 기록했다.

농산물가공업·농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한 데 따른 겸업소득은 가구당 418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고, 급여수입·농업노임 등 사업의 소득은 1152만3000원으로 19.8% 증가했다.

가계 씬임도 늘었다. 농가 가구당 가계지출은 3026만4천원으로 2012년 대비 10.1% 커졌다.

소득 급증에도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었다. 농가 자산은 4억5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사 62주년

순창이 참 좋다!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